

‘대미투자 난항’ 분위기 바뀔까…李-트럼프 추가협상 가능성도

美 구금사태, 비자발급 협상 영향
관세협상 후속협의서 유리할 수도
유엔총회서 한미 정상회담 기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한미 관세협상의 새로운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대미 투자 위축될 수 있어서다. 현재 한미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력 펀드의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8일 만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투자를 독려했고, 우리 기업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근로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

들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인 데다,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수가 없을 것이고,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

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국 인력의 비자 발급 협상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일단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E-4) 연 1만5000개 발급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또 관세협상 후속협의도 유리하게 풀어나갈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 측에서 투자 심리 위축과 사업 지연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지아주에 지어지고 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은 건설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1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일로 최소한 2~3개월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 펀드와 관련해 운용 방식, 결정 구조, 이익 배분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협상 중이다. 미국 측은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의 90%를 갖겠다는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협상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 통상 당국은 회담 종료 후에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5%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아직 발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이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품목관세를 15%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25% 관세로 인해 들어간 비용이 존재한 상황인데, 이제는 일본보다도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팔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협상 후속협의 새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3대개혁 점검” vs 野 “美 구금 재발 방지·배임죄 완화”

나흘간 대정부질문 실시

與 ‘국격·국익, 국민혜택’ 중점 질문
野, 李 정부 정책·예산 적절성 검증
한미통상협상 중간점검 등 최대 화두

여야가 나흘간 이재명 정부 내각 장관들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이 실시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란 종식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재명 정부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야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한미통상협상에 대한 난맥상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5일엔 정치 분야, 16일엔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엔 경제 분야, 1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국격과 국익, 국가대개혁과 국력, 국민혜택을 중점에 두고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만큼,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을 내세워 꼼꼼하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 첫째날 3대 개혁 추진 과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핵심 쟁점을 관련 부처 장관에 점검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저는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한미통상협상 중간 점검이 최대 화두가 될 예정이다. 앞서 현지시간 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하고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에 구금했다.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구금자들의 석방 및 구금 일정을 조율한 결과 지난 12일(한국시간) 총 330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초 단속 당시에도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수갑을 채워 감금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어야 했다”며 “출국 절차도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마저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조사 회피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조정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후속 보완 조치로 배임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에 석유화학·철강·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는 의원들은 해당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산업 지원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해수부 이전·가덕도 신공항 건설’ 최선을 다해 도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 1박2일 부산 찾아
장동혁, 부처 분산 반대 입장에서 선회
오늘 임시청사 방문해 메시지 낼 전망

국민의힘 지도부가 1박2일 일정으로 14일 부산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의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과 해양수산부(해수부) 이전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부산 시민에게 설명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산은 우리 국민의힘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곳”이라며 “또 최근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 것 같다. 해수부 이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부산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사업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전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정부부처 분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만, 당 대표 취임 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부의 졸속 이전과 성급한 일처리에 반대하는 것이지, 해수부와 함께 부처 유관기관까지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입장

을 선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12월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지역의 신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은 주요 건설사의 이탈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관사인 현대건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까지 사업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현대건설은 공사기간 부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며 인프라 신규 수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열망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신공항은 하나의 공항을 건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동권 전체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하는 것이고 수도권권을 아울러 균형발전 새 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내년이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는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하늘길이 열려서 부산이 글로벌 물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고 유능한 인재 모이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15일에도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현장 일정을 이어간다. 장 대표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해양수산부가 옮겨갈 임시청사 현장을 방문해 부산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